

3 미국,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% 추가 관세 부과

➔ 높은 해외 의존도를 안보 리스크로 규정, 미국 내 생산 확충이 목적

● '26년 9월 3일부터 드론 수입에 추가 관세 적용

- 트럼프 행정부는 '26년 8월 13일 대통령 포고문으로 외국산 드론(UAS)과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, 9월 3일부터 최대 100% 추가 관세를 발효
-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,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에서 드론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수입 조정 조치를 확정
- 232조는 철강·알루미늄·구리·자동차·의약품 등 기간산업에 적용해 온 수단으로, 드론이 같은 목록에 편입되면서 기간산업과 동일한 수입 관리 대상에 포함된 상황

● 美 상무부, 공급망 해외 의존을 안보 리스크로 판단

- 상무부는 드론을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높은 해외 의존도 자체를 안보 리스크로 판단, 저가 드론이 고가 무기체계에 피해를 주는 최근 분쟁 양상을 근거로 제시
- 미국 내 드론 제조사도 모터·배터리·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, 일부 외국산 드론에는 운용 정보를 외부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지적
- 미국 내 산업이 전시 급증 수요를 감당할 규모와 속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관세의 핵심 논리로, 조치의 목적은 미국 내 생산능력 확충과 투자 촉진에 있다고 설명

➔ 미국의 외국산 드론 규제 구조와 공급망 전망

(1) 인증은 시장 진입을, 관세는 가격을 결정하는 이중 심사 구조

● (제도 구조) 드론 관세와 기존 FCC 시장접근 규제의 중첩 구조

- 관세의 취지가 미국 내 생산 확충에 있다면 실제 수입 조건은 기존 규제와의 중첩으로 결정되며, 美 연방통신위원회(FCC)의 시장접근 제한에 9월 3일부터 232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
- FCC는 '25년 12월 외국산 드론·핵심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해 신규 제품의 FCC 장비인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, 이후 한시적 예외 경로를 운영 중



- 리스트 등재 이후 업계 반발로 '26년 1월 Blue UAS·Buy American(미국산 조달 우선 규정) 예외를 신설, 이후 완구용 드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기한을 '28.1.1.까지 연장
- 즉 신규 제품은 인증 단계에서,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관세 단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되어, 두 제도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시장 진입 가능 여부와 가격경쟁력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 구조
- (세율 결정) 드론 관세율을 결정하는 제품·원산지·투자 요건
 - 시장접근 요건을 통과한 제품도 세율은 일률적이지 않으며, 232조 관세는 안보 민감도로 기본 세율을 정한 뒤 원산지와 미국 내 투자 요건에 따라 우대·면제를 적용
 - (안보 민감도)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또는 열화상 탑재 드론, 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은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해 추가 관세 100% 적용, 그 외 드론은 25%를 부과
 - (공급망 원산지) 한국·일본·EU·대만 등 지정국 제품은 핵심부품·기술의 원산지 입증 시 총 관세율 15% 이하가 적용되어, 세율이 사양보다 공급망 구성에 따라 결정
 - (온쇼어링) 미국 내 드론·부품 생산시설 건설·확장 계획을 상무부가 승인한 기업은 건설 기간 중 완공 후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제품·부품을 추가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

(2) 단기 대체는 제한적, 대체 공급은 미국 기업과 동맹국이 분담

- (공급망 제약) 완제품·핵심 소재의 중국 집중에 따른 단기 대체의 한계
 - 이러한 규제 강화로 미국 내 중국산 완제품의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은 즉각 낮아질 수 있으나, 핵심 소재·부품 공급망의 단기 대체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
 - 상무부는 자국 공급만으로 국가안보 수요를 메우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, 특히 미국산 드론도 모터·속도제어기(ESC)·리튬이온 배터리·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
 - 232조 관세가 수리·교체용 부품에도 적용되면서, 신규 기체 조달뿐 아니라 기존 보유 기체의 유지·보수 비용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
 - 실제 미국 가스협회(AGA), 텍사스·뉴욕 경찰 관계자 등은 FCC에 미국산 대체재의 가격·성능 및 공급 부족을 이유로 최소 2년 전환기간 부여, 수리용 부품 수입 허용 등을 요구

- **(완제품·시스템) 정부조달 기반 미국 드론기업의 대체 공급 확대**
 - 완제품·시스템 시장에서는 고율 관세와 FCC 제한으로 중국산 드론의 시장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기업의 대체 공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
 - 레드캣(Red Cat)·에어로바이런먼트(AeroVironment) 등은 Blue UAS 등 정부 조달체계에도 진입해 공공 수요를 우선 흡수할 대체 후보로 평가
 - 결국 완제품·시스템 부문의 대체 공급은 관세로 열린 시장 여지를 정부 조달이 초기 수요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며, 조달체계 진입 여부가 개별 기업의 수혜 폭을 좌우하는 구조로 판단
- **(핵심소재·부품) 동맹국 연계를 통한 핵심 공급망 다변화**
 - CSIS는 업스트림 부문의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며, 단독 자립보다 호주(희토류), 한국·일본 (탄소섬유), 캐나다(흑연·리튬 정제) 등 동맹국과의 공동생산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
 - 232조 관세는 지정국 우대세율과 미국 내 생산투자 감면 경로를 병행하고 있어, 이러한 공급망 여건에서 동맹국 공급망 활용과 중국 의존 축소를 유도하는 효과
 - 이에 따라 중국 중심 공급망의 대체는 미국 기업의 완제품·시스템 생산 확대와 동맹국의 핵심소재·부품 공급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, 한국은 지정국이자 소재 공급국으로 관여



출처 : Axios 외(2026.8.)

<https://www.axios.com/2026/08/14/drone-tariffs-president-trump-drone-stocks>

<https://www.investors.com/news/drone-stocks-trump-tariffs-take-effect-aerovironment-avav-ondas-umac>

<https://www.csis.org/analysis/drone-supply-chain-war-identifying-chokepoints-making-drone>

<https://www.csis.org/analysis/beyond-line-sight-how-part-108-could-transform-commercial-drones>

<https://www.whitehouse.gov/fact-sheets/2026/08/fact-sheet-president-donald-j-trump-bolsters-national-security-and-strengthens-u-s-supply-chains-by-imposing-tariffs-on-drones-and-their-parts-and-components>

<https://www.whitehouse.gov/presidential-actions/2026/08/adjusting-imports-of-unmanned-aircraft-systems-and-unmanned-aircraft-systems-components-international-trade-to-the-united-states/>

https://content.govdelivery.com/bulletins/gd/USDHSCBP-4281ea7?wgt_ref=USDHSCBP_WIDGET_2

<https://www.wisdomtree.com/us/insights/blog/from-ban-to-tariff-wall-how-u-s-drone-policy-is-reshaping-the-global-supply-chain>

<https://arstechnica.com/tech-policy/2026/09/trumps-100-drone-tariff-has-cops-and-firefighters-panicking/>